

**이데일리**

# "경기 살려라" 무제한 돈 찍어내는 美...신흥국은 '언감생심'

기사입력 2020-04-26 19:56

美 강력한 달러 패권으로 적자국채 발행  
獨 재정건전성으로 GDP 30% 경기부양책  
브라질 등 코로나19 경제대응 부익부빈익빈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가 경제까지 감염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각국에서 잇따라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규모와 효과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격차가 심하다.

미국은 강력한 달러 패권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1년 예산(512조원)의 6배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이마저도 부족해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는 즉시, 다음 부양책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사정이 다르다. 돈을 마음껏 찍어내며 강력한 부양책을 예고해 자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이들 국가는 돈을 찍어낼수록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구조다. 강력한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없으니 코로나19에 쓰러져가는 경제에도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대책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美, 5차 경기부양책도 예고

미국 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4840억달러(598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4번째 경기부양책이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8주간 직원들의 임금을 대출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100억달러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대출이라고 하지만,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환 의무가 없어지면서 연방정부가 사실상 8주간 급여를 대납하는 형태가 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활동 중지가 '대규모 실직·폐업→소비활동 감소→경기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대납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주기도 한다.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 자녀 1인당 500달러씩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이다. 여기에 투기등급으로 떨어질 회사채 등을 매입하고 필요하다면 구제금융도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약 49일동안 나온 경기부양책 규모는 3조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512조원)의 6배에 달한다.

5차 경기부양책 역시 가까운 시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주장하며 그 규모는 2조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뉴딜 정책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부양책에서는 빠졌지만 주(州)정부·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 역시 거세다. 포브스는 △급여세 감면 △모기지대출·임대료 면제 △학자금 대출 탕감 △실업보험 확대 등이 추가 부양책으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 ◇무제한 발권력에도 달러가치 공고

미국이 이처럼 막대한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돈의 출처는 바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머니이다.

미국 재무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하겠지만, 미국 국채는 위험한 시기 가

장 빛나는 안전자산 중의 하나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달러를 찍어 투자자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엄청난 물량의 달러가 시장에 쏟아지지만 달러의 가치는 견고하다.

아담 포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회장은 쿼츠(Quartz)에 “달러는 누가 제일 통화 가치가 덜 떨어지느냐 대회에서 계속 우승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른 통화들의 가치가 더 빨리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는 지난해 강연에서 미국의 국채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국채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기 만기가 연장되면서 금리 상승폭 역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이미 일본의 실험을 통해 일정 부분 증명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기 위해 일본정부는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BOJ)은 25년간 채권을 구매하고 있지만, 국채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포센 회장은 “돈 찍는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지켜봐라”고 말했다.



△자이르 보로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사진=Afp제공]

#### ◇부양책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국가들

문제는 이같은 메커니즘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서 경기 충격을 막고 싶어도 시장에서 이를 받아줄 수요가 없거나 통화 가치

가 하락할 경우,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며 자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는 경기부양책을 편성하며 강력한 부양지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뛰어난(GDP 대비 60%대) 독일의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보다 하락한 반면,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2% 중반까지 상승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경제·재정 계획' 초안에서 올해 국채 목표를 GDP의 155.7%로 설정, 작년 134.8%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였다.

개발도상국은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에 브라질·멕시코 등 산유국들은 유가 급락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면치 못하게 됐다. 브라질 헤알화와 멕시코 페소 가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하거나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브라질중앙은행은 기습적으로 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했지만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7%대 위로 올라갔다. 통상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채권금리 내려 가게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에 머무르고 금리 매력도 떨어지자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멕시코는 22일 254억달러의 인프라투자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 닉힐 상하이는 "이것은 너무 늦고 너무 적다"며 "올해 멕시코의 GDP는 8% 넘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daily.co.kr)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구독하기 ▶

청춘뉴스~ 스냅타임 ▶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628026>

---